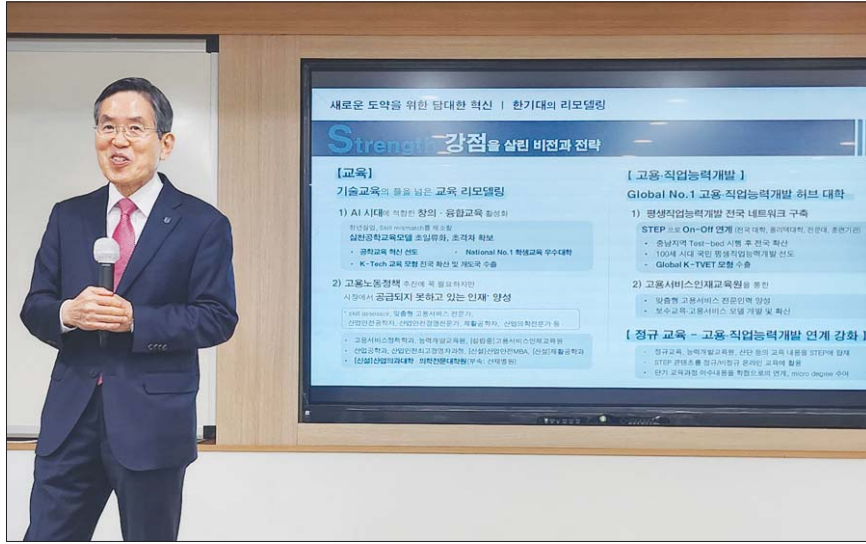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시설 등 활용 '한기대 의대' 설립

유 총장, '한기대 미래 전략' 발표
산재병원 의사가 임상교수 맡아
산재병원서 인턴·레지던트 수련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산업의과대학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와 시설, 의사 인력을 활용한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산업의학전문의 등 공공 의료인력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기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한기대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1989년 한기대 설립 기본계획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며 "산업의과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코로나라든지 메르스 사태 이런 걸 경험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가 됐다"며 "그래서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산업의과대 설립과 관련해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10개 산재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과대 설립)산재병원 활성화와 산재보험 재정 건전화도 맞물린 이슈"라며 "현재 산재병원은 장기요양 환자로 적자 발생이 많고 그것이 산재병원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병

원 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과 한기대에 따르면, 한기대 산업의과대는 한기대 1,2캠퍼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와 시설이 활용된다.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쓰고 일부 산재병원 의사를 임상교수로 활용해 의대 설립 비용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기대가 보유한 첨단 공학기술과, 민간병원이 갖기 어려운 산재병원 재활시설 인프라를 결합하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산업안전공학자, 재활공학자, 산업의학전문의가, 맞춤형 고용서비스

스 전문가 등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인재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최근 20년간 지속 증가 추세다. 특히, 국내 산업재해 치명률(2021년 기준)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으로 영국(0.78명), 독일(0.73명), 일본(1.54명) 등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간 배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매년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한기대는 산업의대 설립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마쳤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총장은 "교육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발표까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배·사과 생산단지 생육관리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대구 군위군의 배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 및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는 수급불안 방지를 위해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나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배 과수원을 찾아 냉해 예방책 살포 현황을 점검하고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냉해 예방책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완료 등 예방을 위해 농가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모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현황과 차세대 과원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기업, 인니 해양플랜트 수주 "재활용 등 진출 다방면 지원"

LNG 연료 운영 등 사업 수주
지난달 1300억 규모 낙찰 후 성과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기업인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3월 인니 전력공사 자회사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4조4000억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권'을 발주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번에 우리 기업이 수주한 규모는 4300억 원으로, 지난 2월23일 '누사 텡가라' 지역의 낙찰(1300억 원)에 이은 성과로 총 560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스엔텍이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해양LNG 연료공급망 구축·개조·운영 등 시공 전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단계부터 최종 수주단계까지 협의에 참여했



정부청사 내 해수부. /메트로

다. 또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란 해양플랜트 전(全) 단계 중 플랜트 건조 이후의 단계이다. 운송과 설치, 운영을 비롯해 및 보수·개조·해체 등이 이뤄지는 분야를 말한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북과푸아' 지역의 입찰에도 국내 또 다른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며, 조만간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개조·재활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개인·기업 모집

환경부, 선발시 최대 8300만원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녹색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중 하나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생태계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올해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참가자격은 예비청년창업자와 초기청년창업기업이다. '예비청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2024년 5월9일~2024년 10월

30일) 내 녹색산업 분야로 창업해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이 대상이다. '초기청년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021년 2월28일~2024년 2월28일)한 기업으로 녹색산업 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2024년 5월9일~2024년 10월30일) 내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과 기업에는 최대 8300만 원의 창업자금과 전문 육성자로 구성된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3월 18~29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누리집(<http://www.eco-startup.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EU 등 6개국에 기술규제 10건 이의제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참석

정부가 유럽연합(EU)측의 불소화온실가스 수입 규제 등 기술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12~15일)'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불소화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Gases)는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데,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를 활용한 대화와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집중호우 등 예방에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664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흡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총 664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총사업비 7462억 원)할 계획이다. 농업용 저수지 총 1만7066개소 중 50년 넘는 시설은 1만4877개소(87.2%)로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최근에 강우강도가 세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노후 저수지의 물 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

설을 대폭 확대(30억 원→430억 원)하여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설규모가 큰(저수용량 500만㎥ 이상) 저수지는 내용적 조사를 통해 내한능력 및 흡수 대응능력을 분석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관리해 왔다.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